



“손에 손잡고” 조직개편안 합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인태 행정위원, 김진표·최재성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새정부 파행 출범 정치적 부담덜기

■ 조직개편안 합의 배경과 득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한 달 가까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2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양보 선언으로 극적 해소되면서 오는 25일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파행운영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양당이 정면충돌 양상에서 극적 반전을 이룬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모두 새 정부 파행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컸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으로서 새 정부 파행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부재 비판과 독선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 손 대표 역시 ‘발목 잡기’ 비판을 감내하기에는 힘이 부쳤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이번 협상 타결로 이 당선인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현 장관들과의 ‘이상한 동거’를 해야 하는 등의 새 정부 파행 출범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한 부처 두 장관’ 체제가 물고 을 공직사회 전반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선인이 구상

李당선인, ‘작은 정부’ 구상 이뤄 孫대표, 야당 대표 이미지 구축

했던 ‘작은 정부’ 구상도 일정 정도는 이뤄졌다는 점도 상당한 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무적 내부 혼선은 이 당선인 중심의 국정 운영에 허점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조각명단 발표도 없이 새 정부 초대 각료 후보들을 공개워크숍에 참석시켰겠다고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 철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이 당선인이 한나라당과 협의도 없이 각료 후보를 전격 발표했던 것은 ‘독선과 오만’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줄 가능성을 크게 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보다 성급한 조치였다는 대안이 높게 나오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에비 야당인 통합민주당이나 손학규 대표 역시 잃은 것이 적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용될 기회를 한나라당에 준 것이다. 때문에 총선 역풍을 우려한 수도권 입지자들의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손 대표는 이번 한나라당과 대치에서 강력한 견제 야당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소득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손 대표 개인으로서 이번 협상 정국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선명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비록 대선 후보로 뛰지 않았지만 이 당선인과 대결 구도를 통해 같은 반열에 오르는 효과도 가졌다. 손 대표는 나아가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줌으로써 판을 크게 보는 정치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문 전문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사는 지방해양환경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1인을 추천하고, 그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2008년 2월 20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새정부, 최소 나흘간 ‘파행’ 불가피

장관 후보자 청문회 27~28일 실시

결렬 위기에 봉착했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 타결됐으나 국회 일정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인 25일 내각이 정상 출범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국회 일정 및 법적 절차상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양당 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마지막 날인 29일 새 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새 내각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양당 수석 대표는 20일 오후 협상 타결 직후 전화 협의를 통해 21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임위별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심의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 개편안

을 처리해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오는 27~28일로 잡혔다. 이는 법안의 정부 의결, 공포 절차 및 인사청문회법 조항 등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정부로 이송된 개편안은 22일 중 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변수는 제거된 상태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포된 개편안에 근거, 곧바로 새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다 해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최소 5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질의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22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자마자 관련 자료를 보낸다 해도 인사청문회는 이로부터 5일이 27일부터나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27~28일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29일 새 내각의 장관들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후속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됨에 따라 참여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에 잔류함으로써 빛어지는 ‘동거 기간’은 4일(25~28일)로 당초 관측보다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청문회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엔 광주·전남 없다

‘무늬만 특별법’ 사업추진 난망

③ 좌초 위기 ‘서남권 개발 구상’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낙후도 1위는 신안군이다.

지난 2004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인구 증가율·노령화지수·지역낙후도·도로율 등 9개 항목을 따져 매긴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데 인구마저 격감하고 사회간접자본도 절대 부족해 비록 단연한 결과였다.

참여정부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신안 지역에 인근 무안(36위)·목포(140위)를 묶어 2020년까지 24조 6천억원을 투입해 6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개발하

경쟁을 시키겠다는 ‘광역경제권 구상’도 서남권 발전을 흔들 수 있는 약재로 등장했다.

서남권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건교위의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서남권(신안·무안·신안)이라는 명칭이 빠지면서 전 국토의 60%가 대상지가 돼 사실상 무늬만 특별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채 발행 특례·공원조성법 적용 특례·토지수용 요건 등도 삭제되거나 강화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더욱이 국회는 이 법안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

한, F1특별법 경주와 동반처리 주장

‘광역 경제권 구상’도 약재로 작용

는 ‘서남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원발의 형태로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자족특별법’(서남권특별법)을 제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상했다.

전남도는 덧붙여 영암·해남 일원 100km를 레저관광도시로 개발하는 ‘J프로젝트’도 시작해 서남권을 여수·광양·순천 등 동부권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 등의 발목 잡기로 좌절 위기에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호남을 한황해경제권의 무역중심지로 꾸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서남권 특별법과 J프로젝트의 활성화의 핵심 변수가 될 F1특별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전국을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권역별

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과 병합시킬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본래 도입과 전혀 다른 ‘괴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F1특별법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문화도시특별법과 동반 처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광주출신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5+2광역경제권 구상도 서남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프로젝트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돼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은 또 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법에서 연간 1조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신설되는 ‘광역경제권특별법’으로 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특효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결해주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폐쇄된 인산염기 분해 방출로
- 효과 극대화, 소변기
- 눈의 건조감과 권태, 이명증
- 안구 피로와 동맥 질환 예방
- (기타, 주근깨와 눈화, 인공눈물
- 비출혈 예방)
- 알코올성질환 및 장기간 시 술
- 중심의 완화, 이명, 근육질,
- 수족저혈소관염 등
- 이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cicpharm.com
 고객센터 080-022-2200